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석

도, 타 지역 불법 폐기물로 '몸살'

환복위 "지난달 충북·강원 753t 군산 반입... 즉각 반출해야" 임실 관광자원 주변 토양정화업 변경 광주 행정처리도 지적

전북도가 때 아닌 타 지역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군산과 임실 지역에서 발생한 타 지역 배출 폐기물의 전북 반입에 대해 즉각적인 반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환경부는 국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충북과 강원 지역 폐기물 753t을 군산으로 반입했다"며 "환경부의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결정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도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또 임실에 등록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과 관련해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식수원 주변에 토양정화업을 변경 등록해 준 광주광역시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요청했다.

이날 정의당 전북도당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전국의 각종 폐기물 반입창고인가"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날 11일 임실군청 앞에서는 임실과 정읍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2000여명이 임실 토양정화업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산, 임실 폐기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지역이 타 지역 폐기물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환경당국은 "토양정화업 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권한이 있는 업무지침을 정화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변경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2018년 10월 23일 이후 국회 계류중이다"며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간 갈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역 불법 폐기물로 인한 도민의 우려가 커 죄송하다.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시군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환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반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민주당 이춘석 의원, '새만금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 관련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 추진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고 새만금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돼, 국내의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새특별 개정으로 새만금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이번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국회의원들도 '5·18 망언' 고소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대상 민병두 의원 등 3인, 고소장 제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또 고소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의원들은 5·18 민주유공자로서 고소장을 냈으며,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뉴시스

설훈·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였는데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망발로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지씨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사법 당국이 신속히 바로 잡아 사법·역사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권고에 따라 이종명 의원의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기로 했다. /뉴시스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전라북도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도의원 39인 "5·18 망언 한국당 국회의원 제명하라"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 의원 39인은 최근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등 이들 전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

한 이들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즉각 제명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5·18 희생자들과 국민 앞

에 백배 사죄하고 한국당 지도부에 이들을 출당 조치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5·18 망언' 징계처분에 "퇴출해야"

민주, 한국당 이종명만 당에서 제명 조치 등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의 '국회 퇴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김진태

의원은 2·27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징계 유보를 결정한 근거로 '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을 들고 있다"며 "한날 당직선출 규정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게 대해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반드시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